‘반성’과 ‘후회’ 사이 … 민주 ‘강선우 사퇴’ 여진

여가부 장관 후보, 갑질 논란에 자진 사퇴…동료 의원들 아쉬움 표현
“여론 악화에 수습 필요”…“임명 결정했으면 그대로 갔어야” 의견도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성의 목소리와 강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24일 MBC 라디오에서 “여가부 장관에 강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데 이견이 크게 없었고 지지하는 입장이었다”며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로서 고민하다 사퇴를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같이 일했던 사이로서 안타깝다. 다만 본인이 고심 끝에 당과 대통령께 부담을 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장철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동료 의원이자 당을 함께 하는 동지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며 “당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을 위해 본인께서 사퇴 결단을 한 것으로, 정치적으로만 보면 강 의원 판단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만 철회하고 22일에는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등 임명 수순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의 엄호 기조도 세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런 기조에도 국민의힘은 물론 진보 정당, 친여권 단체 등에서 도덕성 문제와 함께 역량 부족을 지목하는 임명 불가론이 계속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에야 방어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전날 최고위에서도 강 의원 임명 반대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여론조사 등이 나왔으며, 같은 날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비슷한 우려를 지도부에 사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여론이 가라앉을 틈이 없이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다가와 어떻게든 수습이 필요했다”며 “당 측에서 강 후보자나 대통령실에 사퇴나 지명 철회를 건의한 게 아니라 후보자가 상황을 주시하다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진숙 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때 강 후보자도 함께 정리했어야 했는데 논란을 끌어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이번엔 만시지탄”이라며 “(사퇴나 지명 철회를) 그 전에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하고, 강 후보자는 임명하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결정을 그대로 갔어야 한다. 임명했어야 옳다”며 “결정해 놓고 흔들리면 더 나빠진다”고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담양 수해지역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서왕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4일 담양군 봉산면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철원 담양군수의 수해피해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여수세계박람회 투자금 상환 난제 풀리나

주철현 의원 “3658억원 일시상환→10년 분할납부 전환”

여수시의 최대 현안인 여수세계박람회 정부 선투자금을 일시상환 하는 대신, 10년으로 나눠 분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24일 “같은 당 조계원(여수시을) 국회의원과 함께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정부 선투자금 3658억원의 ‘일시상환’ 문제를 ‘10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국회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간 협의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주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는 미상환한 3658억원을 2025년에 전액 상환할 것을 확정하고 올해 예산안에 명기했으나, 이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주체인 YGPA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비현실적 조치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우려와 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와 농해수위 의정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일시상환 요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무부처인 기재부 ?해수부를 상대로 10년 분할 상환을 포함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기에도 당지도부 일원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정책 전환을 이끌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왔다”며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정된 조계원 의원의 도움도 컸다”고 강조했다.

또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공공개발의 방향을 확실히 다지고, 앞으로 남은 상환 재원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박람회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장은 2013년부터 사후활용을 위해 민간 매각이 추진됐으나 평가 결과 사업 내용이 박람회 성격과 맞지 않아 모두 무산됐다. 2017년에는 복합상업시설 구역에 4개 업체가 투자 의사를 밝혀 제안서를 받았으나 역시, 부적격 판단이 나왔다. 박람회장 운영을 위해 매년 100억원이 필요하지만, 자체 수입은 80억원에 불과해 사후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정위 “세입 구조 정상화 다각 검토”

세법 개정안 논의…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망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의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가에서는 조만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4%로 1%포인트 인하한 최고세율을 복원시키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여 자본시장의 유동성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내용도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하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조직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새로 분리해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을 어떻게 할지, 수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 단일 안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내부에서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를 종합 판단해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힘 지지율 17% ‘역대 최저’

NBS 조사…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64%·민주당 4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2주 만에 1%포인트(p) 하락해 6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1%p 떨어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4%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2%였다.

이는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7월 7~9일) 대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1%p씩 하락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6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96%,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신뢰한다’가 각각 90%, 66%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57%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3%로 직전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2%p 하락한 17%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19%를 기록하며 NBS 조사에서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20%가 붕괴했었다.

/연합뉴스